OECD

장기요양비, 2050년에는 현 수준의 두 배
Spending for Seniors to Double or More by 2050, Says OECD

▶ OECD 국가군에서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는 25명당 1명에서 2050년에 이르면 10명당 1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 "Help Wanted?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-term Care"가 밝혀
- 현재 OECD 국가군의 평균으로 볼 때 GDP의 1.5% 가량 나가고 있는 장기요양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

▶ 전문인력을 장기요양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
- 장기요양 간병인력은 대체로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데다 장래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더 큰 빈곤위험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
- 따라서 장기요양 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
- 독일, 네덜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 등은 최근 정책 노력을 거쳐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유지율을 높인 경우

▶ 이민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
- 호주, 영국, 미국에서는 장기요양 요양인 4명 중 1명이, 오스트리아, 그리스, 이스라엘, 이탈리아에서는 2명 중 1명이 이민인
- 많은 경우 이민 인력은 자격 면에서 자국민보다 우위에 있는데도 받는 임금은 더 낮음
- 이민할당 몫에 포함되는 간병인의 노동 허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필요

▶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70%가 가정요양보호를 받지만 전체 장기요양 지출의 62%를 시설요양이 차지하는 만큼 파트타임 서비스를 늘리고 가족내 돌봄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도 있을 것

2011년 5월 18일 / OECD
〈원문링크: http://www.oecd.org/document/2/0,3746,en_21571361_44315115_47904908_1_1_1_1,00.html〉

영 국

장애 수당과 복지서비스 삭감에 런던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
Disabled people to march in London against cuts to benefits and services

▶ 영국 정부의 장애수당과 복지서비스 삭감 계획에 반발하여 수 천명의 장애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
-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위는 복지수혜 자격요건 변경, 장애생활수당 삭감, 지역정부의 복지도우미 및 복지서비스 예산 지원 삭감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
- 이동 불편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일한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어
- 장애인들은 온라인으로 지역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왜 장애 수당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메시지를 글이나 영상으로 보낼 수 있어

▶ 일하는 장애인 들 중 3분의 1은 저소득층으로 그들이 받는 임금과 수당으로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런던으로 이동할 교통비도 버거워
- Cambridge에 있는 Leonard Cheshire 장애인 요양소의 장애인들은 그들을 런던으로 실어줄 열차가 한 열차당 휠체어 좌석이 두 개씩만 확보되어 있어 시간을 나누어 이동해야 해

▶ 장애인들은 연합정부의 개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그룹
- 비장애인들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다른 저소득그룹에 비해 복지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

▶ 개혁이 추진될 경우 장애인들은 향후 5년간 90억 파운드의 복지지원금을 잃게 돼
- 장애인들은 정부가 예산 삭감의 도끼를 일부러 장애인들을 향해 찍으려고 하는지, 아니면 시민다수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예산 삭감이 가져다 줄 불공정한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건지 정부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해

2011년 5월 10일 / The Guardian
〈원문링크: http://www.guardian.co.uk/society/2011/may/10/disabled-people-march-london-cuts〉

중 국

공공장소에서는 금연, 그러나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
China ban on smoking in public places comes into force

▶ 세계 3분의 1의 흡연자들이 몰려 있는 중국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
- 해마다 백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
- 그러나 이 새로운 조치는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벌칙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어

▶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발해
- 많은 고객들이 이를 싫어하고 불평하기 때문

▶ 새 규정은 식당, 호텔, 기차역, 극장 같은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무실은 대상이 아님.
-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흡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의무는 지지만 그들이 자신의 책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금할 의무는 없어

▶ 1년 전 상해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으나 사람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
-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바에서 술을 마실 때 옆 자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흔히 발견할 수 있어
- 문제는 규정을 어기는 사업체나 개인에 대해 아무런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

▶ 많은 중국인들은 흡연의 위험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듯
-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4명 중 1명만이 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와

▶ 또한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담배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양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

2011년 5월 6일 / BBC News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bbc.co.uk/news/13251926〉

일 본

기록적인 장애인 고용 실적
Record number of disabled hired

▶ 일본의 고용촉진기구인 Hello Work는 2010

년 52,931명의 장애인들의 구직을 도와 1970년 이래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9년보다 17% 향상된 실적이라고 일본 노동부가 전해

▶ 일본 보건 · 노동 · 복지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의 수도 기록적으로 증가해 올해 장애인구직자 수가 132,734명에 달했다고 보고해
- 보건 · 노동 ·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해

▶ 일자리를 구한 장애인들 중 14,555명은 심리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로 이 장애인 그룹의 구직률은 지난해보다 33.2% 상승했으며 신체 장애인들은 24,241명, 정신 장애인들은 13,164명이 새로이 일자리를 얻어

▶ 한편, 올해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은 1,333명으로 1994년 이래 가장 적은 수

▶ 일본 보건 · 노동 · 복지부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이와테, 미야기, 후쿠시마현에서는 장애인 취업 신청자 수가 25.5% 감소해, 구직자가 전체 424명에 불과했다고 밝혀

2011년 5월 16일 / The Japan Times
〈원문링크: http://search.japantimes.co.jp/cgi-bin/nn20110516b2.html〉

미 국

미국 FDA, 전자담배를 담배상품으로 규정
FDA to Regulate E-Cigarettes as a Tobacco Product

▶ 미국 FDA는 연기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도 담배 상품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발표해
-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 약물 운반 장치로 규정하지 않을 것

▶ 미연방기구는 전자담배를 전통적인 담배 및 기타 담배상품과 똑같이 취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발표해
- 전자담배 제조사들에게는 희소식

▶ 전자담배는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폐기용 카트리지에 담긴 액체 니코틴 용액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산하고 이를 흡연자가 들이 마시게 하는 장치
- 심지어 흡연 시 진짜 담배처럼 담배 끝에 불빛이 작동 돼
- 전자담배 제조사와 사용자들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서 발견되는 4,000종의 화학물의 폐해 없이 니코틴 중독과 흡연 행동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

▶ 2002년 최초로 해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미국 내에서는 2006년 말부터

보급돼

– 전자담배는 2006년 사용자가 수 천명이던 것이 현재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 있으며 매주 수 천명의 사용자가 늘면서 고성장을 누리고 있어

▶ FDA는 전자담배를 "치료적 목적"으로 판매할 경우 약물이나 약물운반장치로 규제될 수 있다고 말해

– 한 제조사 사장인 Jason Healy씨는 FDA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로 인해 불법 제조사들을 가려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해

– 일부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의 전통적 담배 사용을 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

▶ 약 4천6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흡연자이며 이 중 40%가 매년 금연을 시도한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전해

– 그러나 니코틴 패치나 껌과 달리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법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

▶ FDA는 전자담배를 담배가 아닌 약물운반장치로 규제하기 위한 법정 공방에서 패소해

– 미 연방법원은 전자담배를 안전 검사에 보다 비싼 임상실험 등의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약물운반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담배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아

▶ 지난해 FDA는 일부 전자담배 제조사에 전자담배에 포함된 건강유해물질과 제조공법이 법을 어겼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 제조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돼

– FDA 관계자는 전자담배에서 니코틴 외에도 다량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운 독성물질도 발견했다고 밝혀

– 그러나 일부 보건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은 니코틴대체치료제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해

2011년 5월 16일 / TIME

〈원문링크: http://healthland.time.com/2011/04/26/fda-to-regulate-e-cigarettes-as-a-tobacco-product/〉